

2012. 6. 14.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6월 15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KDI-CIGI 공동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과제: 대안과 해법」 국제회의 개최

Global Governance Gaps

- 일 시: 2012년 6월 14일(목) 10:00 ~ 17:00
- 장 소: 신라호텔 토파즈룸(영빈관)
- 주 최: KDI · 캐나다 CIGI

- KDI(원장: 현오석)는 6월 14일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CIGI)와 공동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과제: 대안과 해법』 국제회의를 개최, 중요성에 비해 논의가 미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들을 진단하고 구체적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최근 다양한 글로벌 이슈의 등장과 신흥국, 시민사회, 기업 등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이 변수로 작용하며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편 문제가 논의됨.
- KDI-CIGI 공동 프로젝트 'Global Acupuncture Points' 일환으로 이뤄지는 본 국제회의는 두 연구소의 LOU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

- 연구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회의는 연례 회의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12년 11월 캐나다 회의에서는 국제금융 주제를 논의할 예정

□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세션별 4-5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초청되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에너지와 핵안전, 국제개발협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시각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함.

□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와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이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들을 분석하여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 발휘가 기대됨.

□ 국제회의에는 주최 기관의 전문가들과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박홍경 외교부 국제경제국 녹색환경협력관, 클레어 멜라메드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 선임연구위원, 류지철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켄 코야마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근욱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스반드그라프 겐트대 교수, 카스토 스텔 호카이도대 교수,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계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리차드 캐리 前 OECD 개발협력국 국장, 무케시 카필라 前 국제적십자연맹(IFRC) 사무차장, 호미 카라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

❖ 문의: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
(02-958-4206)

❖ 첨부1. 프로그램

❖ 첨부2. 발표논문 요약

❖ **첨부1.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 ~ 10:30	개회식 환영사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 배리 캐린 CIGI 선임연구위원 기조연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10:30 ~ 12:00	제1세션.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좌 장 박홍경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녹색환경협력관 패 널 1. 배리 캐린 CIGI 선임연구위원 패 널 2. 클레어 멜라메드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연구위원
12:00 ~ 13:30	오 찬
13:30 ~ 15:00	제2세션. 에너지 거버넌스 좌 장 류지철 한국에너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 널 3. 켄 코야마 일본 에너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 널 4. 백근욱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 널 5. 디스반드그라프 겐트대학교 교수 패 널 6. 카즈토 스즈키 호카이도대학교 교수 패 널 7.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00 ~ 15:10	휴 식
15:10 ~ 16:40	제3세션. 부산 선언 이후 국제개발협력 좌 장 이계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패 널 8. 리차드 캐리 前 OECD 개발협력국 국장 패 널 9. 무케시 카필라 前 국제적십자연맹 사무차장 패 널 10. 호미 카라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패 널 11.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
17:00 ~	만 찬

제1세션.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Climate Change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기후변화와 제도적 혁신

베리 캐린 CIGI 선임연구위원

-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은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와 기후변화 관련 재원 조달 및 집행 체제에 관한 부분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함.
-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주장할 것이고 선진국의 경우 공동선을 위한 개도국의 공조를 주장할 것임. 또한 이러한 조정이 per capita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반대도 많음.
- 지난 2009년 코펜하겐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선언하였던 녹색 기후 기금 또한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해 보임.
 - 당시 힐러리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과 함께 연간 천억 달러를 모아 기후변화에 참여하는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음.
 - 이 금액은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GNI 대비 0.7%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0.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과는 별개의 새로운 추가적 지원이라고 해석되었으나 EU나 미국의 국가재정상황으로 미뤄볼 때 이는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상의하달식(top-down)의 국제적 협약에 의한 해결을 바라기 보다는 하의상달식(bottom-up)의 대안책을 모색해야함.

○ 새로운 국제 단체들을 설립하고, 각각 중요한 세부 이슈를 다루는 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우선 각각의 단체들이 공동의 이니셔티브에 합의하고 6개 분야의 실행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함.

* '후회없는' 투자에 대한 투자, 새로운 기금 마련과 소비, 중공업과 전력산업(발전부문)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공급 조정을 위한 글로벌 안보, 글로벌 연구 연합, 국제 탄소 배출에 대한 감시기제

○ 새로운 국제 단체들은 기존의 국제기구와 같이 오래된 제안서들의 저장고와 같은 수동적인 기능에서 벗어나야함.

- 모범적 사례로 식량 부문의 Codex Alimentarius*를 제시함.

* 본 기구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두 국제기구 관할하에 역할을 수행함. 두 기구의 총재는 국제적 공동선을 추구하고 농업 분야와 소비자 간의 우선순위 과제들을 해결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

-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들이 새로운 단체들과 기금 투자의 책임을 공유하고, IEA와 UNDP 관할하의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와 유사한 '국제 에너지 연구자문그룹'을 만들고, UNEP와 OECD의 공동 감시기제 아래 실무 사업을 해나가는 것 등이 대안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Global Governance Gaps: Sustainable Development”

글로벌 거버넌스 갭스: 지속가능한 개발

클레어 멜라메드 영국 해외개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21세기 국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빈곤 감축과 환경 문제를 통합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빈곤을 감축하면서 전체적 천연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대신 최극빈층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임.
 - MDG는 매우 드문 다자간 합의였으나 2015년 이후 개편을 앞두고 있으며, 환경 협약에 있어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이나 Rio+20 회의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가고 있음.
- Rio+20회의가 열린 2012년과 현 MDG가 목표한 시점인 2015년 사이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주제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본다면 두 가지 중요한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함.
 - 성장과 인류 발전의 수준을 높이고자하는 국제개발협력은 비교적 정치적인 합의를 얻기 수월한 주제이지만 ‘지속가능한 환경’은 국가 간의 정치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전통적인 개발 정책은 시장 자체에 대한 변화 없이 사람들을 기존의 시장 속으로 편입시키는 반면 환경적 지속성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과 개인 간의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킴.
- 따라서 새로운 목표 아래 각국에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공적·사적 영역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함. 우선 Rio+20회의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은 두 논의의 진전이 필요함.

○ 녹색성장: Rio+20 회의에서 각국의 천연자본 회계(National Natural Capital Accounting)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UN 회원국들을 설득함으로써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도모하고 관련 정보를 확충할 수 있음.

- 현 정보체계는 천연 자원 사용에 있어서 성장 대 환경 목표 간의 상충관계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함.

* 예를 들어 삼림 벌채는 국가 회계에서 GDP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이산화탄소 흡수효과, 공기 정화 효과 등은 나타낼 수 없음.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MDG는 국제 공동의 목표의 상징·정치적 합의와 협력 도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자원 동원 등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되었음.

- 지난 Rio+20회의에서 콜롬비아와 과테말라 정부에 의해 상정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는 '지속성'과 '개발의제'를 아우르며 많은 주목을 받았음.

- 본 제안이 Rio+20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내긴 어렵겠지만 대신 Post-2015 글로벌 개발 프레임워크의 한 부분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The Energy-Economic Nexus of Green Growth” 에너지와 경제 결합으로서의 녹색성장

콜린 브래드포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국내 혹은 국제 녹색성장 센터는 에너지-경제적 결합체로 발전해나가야함.
 - 전세계는 인구나 교통수단의 증가, 신흥국의 발전 등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음.
 - 녹색성장은 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필수적인 모델임.
-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Sustainable Energy System)으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래의 5가지 사항이 수반되어야함.
 -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녹색성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 규제 개혁이 실시되어야함.
 -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에 기업의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함.
 - 각 도시들이 혁신적인 도시 에너지 전략을 적용해나가도록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회 전반의 구성원들, 즉 가족, 기업, 농장 등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해냄으로써 시민들이 그들의 미래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함.
 -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과 같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 공적·사적 영역의 자원을 연구에 지원할 수 있어야함.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역할을 강화하여 매년 '녹색 성장과 에너지 변화에 관한 진행 보고서'를 발표하여 G20 정상회의에서의 녹색성장 논의에 반영하도록 함.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매년 봄 글로벌녹색성장 서밋을 개최하고 있음.
- 향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G20 회원국의 우수 연구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유관 분야의 정책조정 등을 감시·감독할 수 있고, 무엇보다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각국의 '녹색 성장과 에너지 변화에 관한 진행 보고서'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됨.
- 주로 2/4분기에 개최되는 글로벌녹색성장 서밋을 통해 각 국별 보고서가 발표되고, 주로 3/4분기에 개최되고 있는 G20 정상회의 때 이 내용이 제안되는 매커니즘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 녹색성장 주제를 다루기 위해 새로이 제도적 변혁을 피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자원의 낭비 없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함.

제2세션. 에너지 · 핵안전

“Global Governance and the World Energy Market”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에너지 시장

켄 코야마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본 발표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맥락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 위치와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이슈는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국제적 논의로 심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에너지 안보문제는 변동하는 석유가격과 지정학적인 위험, 에너지 공급사슬의 문제,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습성 등 다양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범지역적 환경문제이므로, 산재한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에너지 이슈에 대한 미래 전망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제도적 구축의 문제점과 현재의 위치를 살펴볼 예정임. 중점적으로는 국제 에너지 기구(IEA),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제 에너지 포럼(IEF) 에서 논의한 제도적 배경과 목적, 정책적 틀과 실제 시행에 있어서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할 것임.
- 마지막으로, G8, G20과 같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버넌스 체제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의 도전과제에 대해 갖는 역할에 관해 논 할 것임. 한편, 현재 G8과 G20 국가의 정상들은 에너지 관련 문제를 국제적 공조체제로 풀지 않고, 국내적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에너지 안보와 환경문제의 도전과제를 풀어나갈 것을 독려

“Energy Governance”

에너지 거버넌스

백근욱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향후 20년 동안 1차 에너지의 세계 소비는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까지 석유 30%, 천연가스 22%가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수급능력이 국내외적으로 균형을 잃고 있는 상황임.
 - 에너지 정책에 있어 무임승차하는 국가와 돈을 지불하는 국가간의 불균형에도 영향을 미침.
- 에너지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에너지 정책은 각 국가를 위해 사용하되 전지구적 합의를 고려해야 함.
 - 선진국들은 GDP의 8-10%를 에너지에 사용하며, 개발도상국은 이보다 두세배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함.
- 현재의 시장 거버넌스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를 대체하여 글로벌 에너지를 조정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함.
 - 현재의 양자간 협력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비서방국가들이 서방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에너지 거버넌스 수립을 위해서는 초기에 G20과 같은 에너지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음.
- 현재의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는 저탄소 이코노미로 변경될 필요가 있으나 정치적으로 편의를 띤 협약이 오히려 기후변화 정책과는 모순을 일으키기도 함.

- 일례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과 재생에너지 협약을 체결했으나 에너지 안보(적절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력)와 온실가스 감축 사이에는 상충되는 면이 있음.
 -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내 에너지흐름의 전환에 있어 경제, 기술적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보조와 지원을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한 경우가 많음.
-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에너지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정적 위험을 감소시키며 비상 공급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Redesign the Global Energy Architecture” 글로벌 에너지 구조의 재조정

티스 반 드 그라프 겐트대학교 교수

- 현 세계는 에너지 공황이라 불릴만한 시기에 처해있고, 전 인구의 1/3이 전력난을 겪고 있음. 환경오염과 에너지 공급의 자신감 상실,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등은 지구촌 곳곳의 부패, 적절하지 않은 거버넌스와 인간권익의 남용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국제 에너지 레짐의 주요 목적은 에너지 공급 안보, 에너지 접근, 지속가능성과 안전, 굿 거버넌스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다극화체제의 에너지 레짐이 부족함.
 - 에너지 거버넌스 이행 기관과 권력이 분절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조정과 법률적 권위를 갖기 어려운 실정
 - 현존하는 국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강력한 권위를 누리고 있어 단일화된 국제 에너지 기구를 창설하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거버넌스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음.
 - 각 구체적인 분야에서 한 가지 실행 기관이 권위를 갖는 것을 해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재생에너지 분야는 IRENA, 시스템 분석은 IEA)
- 정책적인 면에서는 에너지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전략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G20에너지 태스크 포스 등을 설치하여 다극화된 거버넌스 체제를 활용할 수 있음.

-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체제들에의 답습이 아닌, 일관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다양한 에너지 거버넌스 기관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함.
- G20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대체의 폐지를 중단하고 다극체제의 대체에너지 무역협정 등의 논의를 주도해야 함. 또한 에너지의 빈곤화를 감소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는 2030년까지 세 가지 목표 (에너지 접근의 보편화,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두 배 이상 확충) 를 논의한 바 있음.
- 세계 은행, IEA, UNFCCC 등 현존하는 기관들의 아젠다는 현재의 지리정치학적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편성되어야 하며, 의사소통 기구로서 에너지 효율성, 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Global Energy Governance”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카즈토 스즈끼 호카이도대 교수

- 본 발표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원자력 규제 거버넌스 관련 새 법안에 대해 설명함. 또한 후쿠시마 사고가 글로벌 핵에너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 내 핵 안전성에 대한 신화와 사고에 대한 준비 부족, 핵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함. 또한 국제적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않은 일본의 독립된 핵관련 규제와 안전에 대한 책임 분산도 동 사고를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간주됨.
 - 일본정부와 원전 운영자는 지역주민과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여 핵 안전에 대한 신뢰를 창출함. 또한 제조사는 사고방지를 위해 하드웨어적(장비 관련) 부분 개선에는 큰 노력을 기울인 반면 그 외 사고발생 가능성은 간과함.
 - 원전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사고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으며, 각 이해관계자의 영향으로 규제기관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게 됨.
 - 스리마일섬 사고 및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국제 규범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주목하지 않음. 이에 따라 일본의 핵관련 규제는 고립되어 독특한 양상을 띄게 됨.
 - 1974년 원자력선 사고, 1999년 토카이 원전사고 등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핵에너지 안전성 책임의 소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제도적 구조가 불분명하게 분산됨.
- 최근 원자력 규제 거버넌스를 간소화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핵에너지 규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음.

-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들은 핵에너지 규제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토 전 총리는 원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임.
 - 정부는 강도 검사(stress test)를 시행하기로 결정,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발전소 붕괴에 대비하고자 함.
- 원자력 규제에 대한 새 법안은 정부가 기존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nuclear village(원자력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에 의존하지 않으며, 비상상황에 직면했을 때 안전을 책임지는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전력회사들은 원자력의 활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스와 석유를 활용한 전력발생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에너지 수요와 급증함. 또한 석유와 가스사용의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핵안전 규제 개선과 관련한 교훈을 얻게 됨.

- 핵 안전성에 대한 국내 정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다른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핵안전 규제 및 실행에 대한 동료간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유럽연합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강도 검사(stress test)와 동료간 평가를 수반한 이니셔티브를 착수했는데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핵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중재를 위해 비기술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있음. 핵안전 규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해 관련 기술·비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서로 교환할 것을 제안함.
- 핵에너지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는 여전히 높은 반면 개도국 내 관련 전문가 및 규제제도는 불충분한 상황임.
- 원전사고는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되는 것을 감안, 핵안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수립하여 지난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전파하고 국가별 안전규제 검토를 수행해야 함.

“Global Governance in Nuclear Energy and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핵에너지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던 지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세계평화와 핵안보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
- 첫째, 방사능 테러, 핵안전 이슈를 제기하여 방사능 물질·시설의 안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켰음. 이러한 새로운 이슈로 인하여 정부 혹은 비정부 영역에서의 주체들의 관심을 이끌어보다 넓은 파트너십의 기반을 마련
- 둘째, 덴마크, 리투아니아 등 6개국과 인터폴(Interpol)을 추가로 초청하여 회원수를 증가하는 등 글로벌 핵안보 개선을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 특히 인터폴의 참여로 인해 그 하위 기관과 유관 NGO 등과의 협력도 증진할 수 있음.
- 셋째, 프리 서밋(pre-summit)행사로 한국은 국제 핵비확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약 200명 이상의 국제 핵에너지 산업 관련 전문가, 연구원, 기업인 등과 성공적인 논의를 마쳤음.
- 마지막으로, 서밋은 한국이 국제 핵 비확산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음. 또한 향후 한국이 동 분야에 대한 국가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핵에너지 분야의 3S, 즉 안전장치(Safeguards), 안보(Security), 안전(Safety),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통합시켜 나갈지를 강구해야만 함. 이는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함.

-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안전장치, 안전과 안보는 근본적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있음.
 - 안전장치, 안전과 안보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핵에너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국 정상들은 ‘핵에너지의 책임 있는 사용’이라는 목표 아래, 각 3가지 측면에서 핵에너지를 평화롭게 사용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이를 국제적 의무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 모임을 가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함.
- 물론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반대하는 국가도 존재하지만 북한의 핵문제나 후쿠시마 사태로 미뤄볼 때, 이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임.
- 일부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반대하는 국가는 핵비확산 문제가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다른 국가, 특히 이웃 국가의 핵시설, 혹은 핵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함.

제 3세션. 국제개발협력

“How Should the Global Architecture for Development Evolve?” 개발의 글로벌 구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무케시 카필라 맨체스터대학교 교수(前 국제적십자 연맹 사무차장)

- 현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글로벌 구도는 UN의 설립 이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관들로 확대되어왔음.
 - UN 체계 아래에는 각 분야별로 특화된 기구인 WHO, FAO, UNICEF, ILO 등이 있고, 그 외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도 존재하며, 나아가 특정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는 OECD DAC, EU 등도 존재하고 있음.
 - 최근에는 시민사회와 기업들도 국제개발의 주체로 나서면서 적십자 연맹, Gates 재단 등을 비롯한 다수의 NGO들이 다자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 이러한 주체들의 과잉으로 인하여 기구 간 조정 문제가 대두하면서 ECOSOC, World Assemblies, Executive Groups 등의 특화된 기구들도 등장하게 됨.
- 과거 일방적 원조와 공여국 중심의 체제에서 수원국과 공여국이 책임을 공유하고 국가적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는 방향으로 개발 원조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왔음. 2015년 이후 MDG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
 - 첫째, 개발은 하나의 특정 분야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간주하는 시점에서 볼 때, 한 국제기구나 연합기구에 의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 환경보호, 인권, 이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류화 되어야함.

- 둘째, 개발에 있어 일부 세부 분야(보건, 교육 등)의 경우 많은 기관들이 지식과 접근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성을 추구해나가고 단일화를 지양함으로써 바람직한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음.
 - 이렇게 다양한 국제기구들 속에서 각 기구들은 고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른 주체들과 대립 혹은 협상의 과정을 통해 특정 목표를 추구해나감. 이러한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음.
 - 개발협력에서도 수원국들이 어떤 원조, 어떤 공여국을 더 선호하는지 선택할 수 있어야함. 물론 수원국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선행되어야함.
- 현재와 같은 시스템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경쟁을 도모하고 성과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함.
- 최근 들어 기업은 녹색성장, 노동·고용 문제, 빈곤 감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근본적으로는 임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화된 참여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개발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 자료 수집 방법 등이 전수되고 있지만 투명성이나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독립된 위원회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개발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공여국 단체나 개발 조정의 과정에서 걸프 국가들, 인도, 중국, 브라질 등 소위 '비전통적인' 공여국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DAC은 앞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주체들을 감안할 때 어떤 조정을 해나갈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